‘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모두 부결

尹 47.4%·李 45.1% 찬성
국힘 112명 전원 ‘당론 찬성’
민주당 무더기 동정표 나온 듯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다. 반대는 145명, 기권은 9명이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 반대는 155명, 기권은 6명이었다.

이날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으로 표결했다. 소속 의원 113명 중 구속 수감된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 112명이 당론대로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무더기 ‘동정표’가 쏟아져 부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번까지 5건이다. 민주당 노웅래(지난해 12월 28일)·이재명(올해 2월27일) 의원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제(3월30일) 의원은 소속 당의 당론 찬성 속에 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논리 필연적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은 돈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관석·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 탈당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앞서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된 지난 2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시에는 ‘부’자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게 쓰인 두 장의 투표지가 나와 개표가 지연됐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저의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검찰은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면서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정보 흘리기 등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가면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면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겠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거기까지(의원직 사퇴)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무소속 이성만(가운데)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옆을 지나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뒷모습은 신상발언을 마친 윤관석 의원.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38.3%…2주 연속 하락세

리얼미터…국힘 36.8%·민주 44.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5일과 7~9일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p) 하락한 38.3%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 넷째 주부터 5월 넷째 주까지 5주 연속 상승해 40%대로 올라섰다가 직전 조사에서 0.2%p 내리고 이번 조사까지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주로 대전·세종·충청(7.1%p↓)과 서울(3.9%p↓), 인천·경기(3.1%p↓), 남성(3.4%p↓), 진보층(3.8%p↓), 보수층(3.3%p↓) 등에서 하락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6%p 높아진 59.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역시 직전 조사에서 0.7%p 오른 데 이어 2주 연속 상승세다.

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5.8%p↑), 인천·경기(4.5%p↑), 남성(2.9%p↑), 30대(5.0%p↑) 보수층(5.3%p↑) 등에서 주로 올랐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6%p 내린 36.8%, 더불어민주당이 0.5%p 오른 44.2%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전주 4.3%p에서 7.4%p로 벌어져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의 경우 이념 성향별로 보수층(5.8%p↓, 70.4%→64.6%)과 진보층(3.5%p↓, 15.7%→12.2%)에서 모두 지지율이 하락했고, 연령별로는 30대(8.9%p↓, 38.7%→29.8%)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민주당은 보수층(3.8%p↑, 18.7%→22.5%)과 30대(8.8%p↑, 38.6%→47.4%) 집단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정의당 지지율은 0.6%p 높아진 2.9%를 기록했고, 무당층은 1.9%p 늘어난 14.2%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하라”

민간단체 보조금 후속조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인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런 방식의 사적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민간 단체 보조금 및 교육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고민이 크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최고위 첫 참석 김가람 “지도부 한마디·행동 하나 큰 영향”

“지역민 요구 잘 살피겠다”

국민의힘 김가람 신임 최고위원은 12일 “지도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현장에서 고생하고 노력하는 당원들께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당원들의 노력과 국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늘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 최고위원은 “저는 광주 출신 신임이다. 그런 저를 70%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셨다”며 “제 당선의 결과는 어느 지역도, 어느 세대도 포기하지 말라는 국민과 당원의 엄중한 요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 41개 기초단체 중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은 1명도 없다. 무소속 단체장은 10명이나 된다”며 “가장 먼저 그 지역 주민께서 느낄 수 있는 막연한 소외감과 불안함을 집권여당이 나서서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을 호남 지지율 몇 퍼센트(%) 목표, 어떤 정책 전략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당연한 책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이 제시했던 광주복합쇼핑몰은 신세계 스타필드, 광주 현대백화점의 더현대, 광주 롯데의 제3 롯데월드 구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지역민 요구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